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 차질

시의회 "선심성 예산" 실시설계비 등 20억 전액 삭감
토지 매입 사전 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 안돼

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내년도 노동인권회관 건립 예산 20억800만원(토지매입비 12억원·실시설계비 8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노동인권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매입의 사전 절차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회는 빛그린 산단(광산구)에 조성하는 노사동반지원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노사동반지원센터와 상당 부분 기능이 겹친다"며 "노동계와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동반지원센터는 '광주형 일자리' 연구·교육·홍보 등 거점 기관이다. 450억원(국비 216억원·시비 234억원)을 들여 빛그린 산단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 일자리 센터, 주거·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번 회기에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계획(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내년 3월 회기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노동인권회관 예산이 시의회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광주시는 올해 8월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 도시 실현을 결의하고 공동 사업으로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시비 200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노동 인권·역사 전시관, 자료실, 노동자 복지·편익 시설, 사무공간 등을 갖춘 노동인권회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 내년 1월부터 건축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나는 가위춤 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성과 보고대회 소통방 장기자랑에서 남구 대촌동 장수마을 웃음반상회원들이 가위춤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1000번' 공항버스 결국 폐업

적자 못 이기고 면허 반납

2002년부터 광주공항과 도심을 이어오던 '1000번' 광주 공항버스가 면허를 반납하고 결국 폐업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공항버스 운영회사인 (유)광주관광은 지난 9월 9일자로 면허를 반납하는 등 폐업 했다.

광주 공항버스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 중단을 하면서 광주시와 운행 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운영업체 측은 "월 3000여만원의 적자로 운영이 어렵다"며 준공영제 편입 등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2017년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경쟁 버스 노선이 생겨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 10월 '공항버스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 공고' 당시 공고문에 '적자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명시된 점을 내세워 적자 보전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요금인상, 무료 환승제 편입 및 환승 손실 보전, 노선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돼 운영 업체 측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연계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사라진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시군 공모

내년 2월 14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오는 2020년 2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은 지자체(시군)에서 노후 온실 재배시설을 집적화하거나 유휴 부지에 신규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에서 부지를 우선 확보해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신규단지 조성은 10ha 이상으로 ha당 5억원, 기존온실 개보수는 5ha 이상으로 ha당 2억5000만원이다.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된다.

지원 사업 내용은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식품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구두(PPT) 발표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선정한다.

원예단지 기반을 조성한 이후에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 스마트팜 산지유통센터(APC) 등 정부의 기존 사업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오래된 온실을 교체해 시설 현대화를 이루고, 나아가 ICT(정보통신기술)가 융복합한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로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원, 보좌관 급여 일부 되돌려 받아 말썽

문제 불거지자 금액 돌려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수 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좌관 B씨로부터 급여 중 매달 8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보좌관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지난달 사직한 뒤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고발했다. B씨는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 240만원 중 매달 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다시 의회에 전달했다.

광주시의회 보좌관은 총 22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지만, 나머지 8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추렴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의원은 B씨가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B씨에게 모두 돌려줬다.

광주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A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당은 최근 1차 조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오는 7일 윤리심판원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